

# 폭염 생존권, 그늘없는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

의정단상

강수훈  
광주시의원



해마다 여름이 되면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말 그대로 '역대급 폭염'이다. 체감온도는 40도를 훌쩍 넘고, 자동차와 아스팔트 위로 뿜어내는 열기로 공기조차 후끈하다. 이제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식지 않는 열대야가 일상이 되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사무실이나 자택 안에서야 짜증 정도로 그칠 수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이 무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차가운 실내로 이동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땀방아 아래에서 하루 하루를 온전하게 버텨내야 한다. 그래서 폭염은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곧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그늘없는 사람'에게는 생존의 벼랑 그 자체다.

작년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쪽방, 달동네, 옥탑방처럼 단열이 되지 않는 공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9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가장자리에 있는 이곳에는 냉방은 커녕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낮에는 달아오른 지붕이 실내 온도를 40도까지 끌어올리고, 밤에도 그 열기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쪽방 거주민 상당수는 전기요금에 무서워 선풍기조차 틀지 못한 채 물수건에 의지하는 노인들이다. 쪽방에 살면서 변변한 수입이 없는 이들

에게 더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기로다.

폐지 좁은 노인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다. 오전 10시가 채 되기도 전에 길 위는 타들어간다. 그 위를 손수레를 끌며 걷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얼굴은 별경계 달아오른다. 폭염 특보가 발령된 날에도, 그들은 거리로 나온다. 폐지를 주워 파는 일이 생계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단 몇 푼을 위해, 그들은 매일 생명을 걸고 더위와 싸운다. 폭염은 그들에게 '재난'이 아니라 '일상'이다. 심지어 냉방이 잘 되는 카페나 건물에 잠시 들어갔다 가 쫓겨나는 일도 허다하다. 그늘도, 쉼도 허락되지 않는 이 여름의 잔혹함은 오로지 약자의 몫이다.

전통시장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에어컨이 거침없이 돌아가는 대형마트와 달리, 좁고 덥고 습한 시장 골목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이들은 냉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래된 천막은 땀방울을 막지 못하고, 바닷은 열기를 품은 채 온종일 끓는다. 장사라도 잘 되면 돈 버는 재미라도 있을 텐데 장기 불황으로 사람도 없다.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 언제 올지 모를 단골고객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더위와 싸우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은, 사실상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이다.

폭염 속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채나 에어컨이 아니다. 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생존의 그늘을 만들어 줄 책임 있는 정치다. 폭염은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피해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철저히 사회적 문제다. 이제 폭염은 사계

절 중 여름에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대의 인권 과제가 되었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숨이 더위에 의해 막힐 때조차 그것을 개인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형적인 이상 기후 속에 참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정치가 앞장서서 폭염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 '폭염 생존권'을 공문화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프랑스는 2003년 폭염으로 1만5000명이 사망한 이후, '폭염 대응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고령자, 1인 가구, 노숙인을 위한 집중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냉방 지원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복지를 강화했다.

광주광역시도 최근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폭염 속 안전을 위해 보호용품 꾸러미를 제공하고, 대체 일자리 지원 및 안전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염 대응을 명분삼아 몇몇 현장을 보여주듯 식으로 둘러보고, 격려 사진만 남기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단발적인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위 속에서도 매일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이들이 '폭염 생존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일상적 조치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인 권리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한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가장 시원한 곳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가장 더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름을 보내는가에 달려있다. 이 여름, 사회적 약자들이 땀과 숨으로 버티는 자리에 정치가 먼저 그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社說

###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사필귀정 아닌가

#### 진실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2시께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125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진실 규명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남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긴 이날 오전 2시 7분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의 우두머리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방해하는 등의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이면서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선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사법당국은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상식을 회복시켜야 한다. 내란 등 국가를 위기로 내몬 공모자에 대해서도 낱날이 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외환 의혹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이다.

### 고려인 소비쿠폰 제외, 또 다른 차별이다

#### 국적 아닌 삶을 기준 삼아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려인 동포 다수가 제외되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됐지만,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와 단기체류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광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7000여 명의 고려인 중 절대 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고려인들은 조선 말 연해주이주 이후, 일제강제이주와 러시아·우크라이나 내전을 거치며 고단한 디아스포라의 길을 걸어왔다. 조상들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주민등록 기준의 내국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지만, 고려인들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전쟁 트라우마까지 감내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왔다. 그럼에도 정책적 배제는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복지'가 국적에 따라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디아스포라 동포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철학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해외 거주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내 정착 동포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번 소비쿠폰 배제를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는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비자 유형에 따른 차등이 아닌, 실질적 체류와 공동체 기여도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광주는 이미 전국 최대 고려인 정착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한민족의 뿌리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국적만을 기준으로 선을 긋는 정책은 더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고려인을 단지 외국인으로 취급하는 낡은 시선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로 포용하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전 국민' 정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전남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전남일보  
E-Mail : jnibo@jnilbo.com



### 서석대



키르기스스탄 서북쪽 잘랄아바드 인근 아르슬란밥은 웅장한 꽃이 만발한 오아시스로 유명하다. 동서로 길게 이어진 바바쉬아타 산맥을 따라 드넓게 펼쳐진 숲에는 수많은 꽃이 사시사철 피어나 천상의 화원을 연출한다. 해발 1700m의 고지 곳곳에 숨겨진 언덕과 계곡 사이 사이에 자리잡은 호두 숲도 장관이다. 전체 면적이 전라남도의 56.7%에 이르는 70만 ha가 넘는다는 이곳 호두 숲은 지구 상에서 가장 큰 호두 숲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호두나무도 최대 30m에 달하고 나이는 1000년이 넘는다. 그야말로 세계 최고와 최하를 자랑하는 호두 숲이다.

#### 호두의 재발견

기원전 330년 경, 정복자 알렉산더가 중앙아시아 탄산 산맥 남쪽까지 내려왔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70여 개의 도시를 건설했던 그가 그곳에 새로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고산지대인 데다 오랜 전쟁에 지친 병사들이 이름 없는 병으로 쓰러져 갔다. '후퇴할 것인가 강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알렉산더는 때 맞춰 찾아온 현자의 도움으로 아르슬란밥 호두 숲에서 채취한 호두를 병사들에게 먹여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알렉산더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복전쟁에 나설 때면 아르슬란밥 호두를 마차에 싣고 다니며 즐겨 먹었다고 한다.

페르시아가 원산지인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 가난했던

시절 생명을 지켜주던 중요한 먹거리였다. 단백질 함유량이 옥류보다 많고 지방 또한 돼지고기의 두배에 이르지만 모두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성인병에 걸릴 염려도 없다고 한다.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물질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호두나무의 쓰임새도 다양하다. 가볍고 유연하며 물에 젖어도 변형이 없고 충격에도 강한 호두나무는 예로부터 귀한 목재로 이름이 높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전투기에도 호두나무가 사용됐다고 한다. 과거 중국에서는 황제의 시신을 넣던 관을 재궁(梓宮)이라 해서 호두나무로 만들었다.

최근 하루 한 줌의 호두가 대장암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호두에 포함된 식물성 화합물이 장내 미생물에 분해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뇌와 심혈관 건강에 효과가 뛰어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심장병 위험도 낮춘다고 한다. 호두의 재발견이다. 호두는 따뜻한 햇볕을 좋아해 재배지로는 전남이 최적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해 전남으로 귀농하거나 은퇴한 이들이 선호하는 작목이기도 하다. 한여름 시원하게 땀을 가지와 무성한 잎새가 만드는 그늘도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데 제격이다. 맛과 멋은 물론이고 건강과 탄소감축까지... 모든 덕목을 갖춘 호두의 재발견이 반갑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